

[종합]

식중독 환자 관리 주먹구구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의 무관심과 일선 병원들의 보고 소홀로 광주지역 식중독 환자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중독 환자를 진료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병원이냐의 사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규제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다원화된 식중독 환자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8월말 현재까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된 광주지역 식중독 발생 건수와 환자수는 13건에 420명으로 집계됐다.

강기정 의원, 광주식약청 제출 자료 분석 광주 신고누락 환자비율 전국 최고 보고 안한 병원·의사 제재 안해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보고된 진료건수는 9만8천496건, 환자수는 8만4천3명으로 나타나 신고 누락비율(환자수 기준)은 무려 200배에 달했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식중독 발생 건수는 36건에 환자는 1천565명으로 광주식약청은 집계했으나 심평원의 진료

건수는 13만9천770건에 환자수는 12만823명으로 나타나 누락비율은 77.2배로 조사됐다.

한편 전국적으로 식약청에 보고된 식중독 발생 인원은 2만9천840명이었으나 심평원에서 집계한 환자는 186만16천133명으로 무려 6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식약청의 자료와 심평원의 자료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일선 병원에서 식중독 환자를 진료한 사실을 보건소나 행정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광주식약청도 인력난을 이유로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병원이나 의사를 적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 등 제재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정 의원은 “식중독 환자 관리가 소홀히 이뤄지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며 “특히 광주 식약청은 심평원의 자료를 활용해 식중독 환자를 진료하고도 보고를 하지 않은 병원은 행정당국에 통보,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시 설

정부, 엑스포 여수 유치전략 차질 없어야

29일 여수에선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다. 정부가 한명숙 총리 주재로 제2차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박람회 유치를 위해 총력을 경주키로 한 것이다. 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마당에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엑스포 유치를 총력 지원키로 한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하다. 엑스포는 산업·기술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모로코 및 폴란드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 없이는 유치가 성공할 수 없다. 더구나 여수는 지난 2002년, 결선투표에서 중국 상하이에 패배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

정부는 박람회 준비상황을 총체적으로 점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다. 순천~여수간 국도 17호선 확장

전라선 복선전철화, 전주~광양간 및 목포~광양간 고속도로는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도로와 환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없이는 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수 없다.

재외공관이나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부와 기업이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 2002년 여수가 상하이에 밀린 것은 정부 및 관계기관의 부정확한 정보 분석과, 미흡한 대처, 정치권의 비협조 등이 근본 원인이었다.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야 한다. 시간은 많지 않다. 개척지는 내년 3월 후보지 실사를 거쳐 내년 말 최종 결정된다.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치밀하게 전략을 마련, 엑스포를 반드시 유치해야 할 것이다. 유치가 또 실패하면 그 후유증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나눔과 상생의 한가위가 되기를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온다. 올 추석은 최장 9일 동안의 황금연휴가 이어져 더욱 설레게 한다. 귀성 차량이 벌써부터 줄을 잇고 있다. 부모 형제와 만나 상모도 하고 모처럼 이웃들과 함께하며 각박한 세과의 시름을 한때나마 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민생은 여전히 어려워도 한가위만큼은 즐거운 명절이다.

그러나 올해엔 추석이 즐겁지만은 않은 사람들이 유난히 많을 것 같다. 불경기에다 취업난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사회복지시설을 찾는 발길이 뜸해졌다고 한다. 더욱 외로움을 느끼는 이런 명절 때만이라도 찾아와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는 인정마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슬픈 일이다.

우리를 더욱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해체된 가정의 아이들이다. 통계청의

집계만으로도 지난해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맡고 있는 가정이 137만 가구나 된다. 부모 없이 조부모와 손자녀가 사는 조손가구도 무려 5만8천 가구에 이른다. 5년 전에 비해 21.9%와 28.5%씩이나 늘었다. 이들은 명절때면 더욱 쓸쓸하고 외로워진다.

추석이 왜 민족 최대 명절이었는가. 사람 사이의 보이지 않는 벽을 스스로 허물고 또 문을 열게 되는 따스한 정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명절 때만이라도 한 번쯤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고 인정을 베푸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명절의 참된 의미는 나눔과 상생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올 추석은 인정이 넘치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어느 때보다도 긴 휴추석연휴 동안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

광주·전남 3천500여명 움막·비닐하우스서 산다

심상정 의원 '인구주택조사' 분석 “극빈층 대책 절실”

광주·전남지역에서 움막이나 돌굴, 판자집, 비닐하우스 등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공간에 사는 사람이 3천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국회 제경위 소속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움막, 돌굴, 판자집, 공사장 임시막사 등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1천515가구에 3천57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394가구에 914명, 전남은 1천121가구에 2천662명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거주수를 기준으로 움막이나 비닐하우스, 판자집 등이 559호, 건설공사장의 임시막사나 돌굴, 업소의 잠판자 등 방 등은 750호(집단가구 포함)였다. 전국적으로는 4만5천237가구에 10만 9천512명이 비정상적인 거주공간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광주·전남은 가구수나 가구원수에서 전국의 3.3%를 차지했다.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공간’은 거주수를 기준으로 5년 전에 비해서는 30% 가량 줄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과 비해서는 7%, 15년 전인 1990년에 비해서는 49%가 늘어났다.

심 의원은 “사람 사는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곳에 거주하는 ‘부동산 극빈층’의 열악한 현실은 주택문제이기 전에 인권문제”라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특히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부동산 극빈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주거비 지원 등 맞춤형 주거복지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홍식기자 who@kwangju.co.kr

“국내 짝퉁 명품 1위는 샤넬”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 주장… 장신규류 위조 973건 적발

국내에서 적발된 가짜 명품 가운데 프랑스 샤넬 상표를 단 제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이 29일 주장했다.

국회 산업지원위 소속 이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 8월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해외상표 위조 건수는 총 7천636건이고, 이 가운데 샤넬 상표의 제품이 1천260건(16.5%)에 달했다.

이어 역시 프랑스제인 루이비통이 839건(11%)이었고, 네덜란드 까르띠에 621건(8.1%), 이탈리아 구찌 542건(7.1%), 이탈리아 페라가모 409건(5.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장신규류가 1천6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샤넬 상표가 973건으로 60.4%를 차지했다. 가방류에서는 루이비통이 320건으로 샤넬(159건)을 제치고 ‘1위 짝퉁’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같은 기간 위조상품 제작, 유통과 관련해 처벌받은 건수는 384건에 달했고 1천743건은 시정권고 처분을 받았다”며 “우리 사회에 왜곡된 ‘명품 지상주의’가 얼마나 만연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조사결과”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순학구 전 경기지사 광주 ‘민심 대장정’ 차기 유력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인 순학구 전 경기지사가 ‘100일 민심 대장정’ 92일째인 29일 광주를 방문, 광주공무원대 ‘사랑의 쉼터’에서 노인들에게 점심식사를 나눠주고 있다. 순 전 지사는 이날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하남산단내 중소기업에서 현장체험을 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與 대선후보 100% 국민참여 경선

내달 2일 비대위서 확정

열린우리당은 차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제) 선거인단을 당원참여 비율 할당 없이 100% 국민참여 방식으로 구성하기로 잠정 결정을 내렸다.

우리당 오픈 프라이머리 태스크포스(TF)는 28일 자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론짓고 내달 2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관련안건을 상정해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달 12일부터 27일까지 지역별 순회 당원토론회를 진행해 선거인단 구성 시 당원 참여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고 100% 국민이 참여해 당원의 기록권을 포기한다는 데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TF는 이를 위해 실무적으로 당내경선운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57조의 3을 손질해 ‘당원을 경선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고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靑, 한·일정상회담 10월 중순 이전 추진

청와대 당국자는 29일 한·일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 “10월 중순 이전을 염두에 두고 협의중이며, 추석명절에 지장을 주는 일정은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어제 양국 정상이 전화통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고 구체적 시기와 장소에 대해 실무적으로 협의중이지만, 아직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해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방한해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아베 총리가 그동안 한일정상회담이 중단됐던 결정적 이유였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스쿠니 참배를 비롯한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성의있는 입장을 나타낼 경우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중순경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한일정상회담 일정이 최종 조율, 확정될 경우 한중-한일, 또는 한일-한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개최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중두



요즘 내가 잠이 안온다

기아車 광주공장 정상화

‘선조업 후협상’ 합의 뉴카렌스 라인 재가동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뉴카렌스 생산라인이 29일 새벽부터 정상가동됐다.

기아차는 일부 대의원들의 주도로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집단적 잔업거부와 26일 오후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 뉴카렌스 생산라인이 29일 새벽 1시 30분부터 정상적인 조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8일 밤 김준겸 광주공장 노조지부장이 직접 나서 대의원 간담회와 조합원 조회를 통해 병목(NECK)공정에 대한 회사-노동조합-대의원 3자 합동실사와 협의를 약속했으며, ‘선조업 후협상’을 제안하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8일 지역경제를 위한 파업철폐와 정상조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광주상공회의소 등 경제·시민단체 대표들은 기아차 광주공장의 정상조업 소식에 안도하며, “향후 불법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더 나아가 노사화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디딤돌이 돼줄 것”을 기대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이번 뉴카렌스 생산라인의 잔업거부와 불법파업으로 2천400여대 생산차질과 370여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 제2순환도로 특별감사 청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강래)는 29일 광주 제2순환도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무연산 터널도로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기로 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건의 감사청구안을 의결했다. 광주 제2순환도로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 청구는 과다한 보상 등으로 인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한제국 황위 이해원 응주 승계

29일 ‘女皇’ 대관식 가져

일제 침략으로 몰락한 대한제국(조선) 황실의 후손들이 황실 복원에 직접 발벗고 나섰다.

‘대한제국 황족회’는 29일 낮 서울 힐튼호텔에서 대한제국 황위 승계식을 갖고 의친왕의 둘째 딸 이해원(李海媛·88) 응주를 제 30대 황위 계승자(女皇)로 추대하고 대관식(사진)을 거행했다. 황족회는 이 구(李玖) 황위 계승자(29대) 타계 등을 계기로 대한제국 황손 10여 명이 중심이 돼 결성한 가족회다.

황족회는 “대한제국 황실이 일제에 의해 강제 침탈된 지 100년, 조국이 광복된 지 61년이 됐으나 영친왕(28대)의 아들 이 구 저하가 후사 없이 작년 7월 도쿄에서 의문사로 타계해 영친왕가의 맥이 끊김에 따라 해원 응주를 30대 황위 계승자로 추대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해원 응주는 여성으로서 대한제국 황실의 법통을 잇는 것은 물론 황실의 대표 전권, 황실 유지보존 및 복원 사업권, 31대 황위 계승 후계자 지명권을 갖게 된다고 황족회는 밝혔다.

대한제국 황실의 후손들이 일제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힌 황실을 재건하고 보존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앞으로 이들의 황실 복원 노력이 여론의 관심과 지지를 받으며 대중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들은 올 5월5일 고종황제의 둘째 아들인 의친왕의 부인 가운데 당호(堂號·황족인칭)를 받은 부인과 의친왕 사이에 태어난 자녀 후손이 즉위할 때 황족회를 결성해 황실 대통을 잇기 위한 황위 계승 준비를 서둘러 왔다.

황족회는 이번 황위 승계를 계기로 앞으로 외국 황실들과의 교류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1(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2-0118)	총 무 부 2200-511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 고 국 2200-521	편 매 부 2200-551
정 치 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디 지 인 2200-536	서울지서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사 회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